

“장성, 첨단 미래산업·대한민국 대표 심터 육성”

김영록 지사, 장성서 정책비전투어 의료 클러스터 등 7대 비전 제시 AI 전후방 산업 통해 일자리 발굴 “성장 장성”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

전남도가 장성을 첨단 미래산업 중심지와 대한민국 대표 심터로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5일 장성군청 아카데미실에서 장성군 정책비전투어를 개최하고 장성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김 지사는 “의료 및 아열대 농업, 첨단 데이터센터 등 다방면에서 ‘성장 장성’이라는 새로운 캐치프레이즈하에 발전하고 있는 장성에 축하와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며 “장성 발전을 위해 전남도도 앞장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장성은 지금까지의 성공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시 브랜드 성장 장성으로 미래 100년 준비하는 대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김영록 지사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온 가족이 행복한 ‘군민 행복시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은 아직도 산재돼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도비 10억원 지원이 절실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 지사는 “청원 지하차도와 관련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5일 장성군청에서 ‘장성군 정책비전 투어’ 토론회를 주재하고 미래 신산업 육성 등 지역 발전에 대한 의견과 제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해 이미 전남도도 적극적인 지원을 준비중에 있다”고 화답했다.

이어 “전남도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권한이 중앙에 집중돼 장성군 그린벨트 해제 등 다양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남특별자치도 설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남도는 장성군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지사는 “이번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

상 수상한 만큼, 이번 수상을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아 학문과 선비의 고장인 장성에서 매년, 또는 격년제로 문학박람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첨단 미래산업 중심, 대한민국 대표 심터 장성’을 주제로 미래비전을 발표한 나강열 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장성 7대 미래 비전으로 △뇌혈관 특화 첨단의료 클러스터 조성 △첨단산업 혁신거점 구축 △대한민국 대표 국민심터 조성 △명품 문화관광도시 조성 △아열대농업 선

도 혁신 플랫폼 △장성 복합 쇼핑·문화거점 구축 △초광역 교통 네트워크 단계적 확보 등을 제시했다.

나 연구원은 “휴양과 치유, 여가가 향후 장성의 미래 발전을 견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정책 토론회에서는 장성 청년 및 군민, 장성군 관계자들과 김 지사 및 전남도 실국장들의 질의 응답이 진행됐다.

질의에서 한 청년은 “장성 생생형 AI창업지원센터 구축과 관련해 얼마 정도의 취업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소영호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창업지원센터 구축은 평균적으로 운영을 위한 20~30여명의 인력 채용이 대부분이나, 전남도는 이에 그치지 않고 기업유치 및 스타트업 인재 양성 등을 통해 전후방 산업을 구축해 더 많은 일자리를 발굴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다시 마이크를 잡은 김 군수는 “장성호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전남 균형발전 300 사업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노후 관광지 활성화는 꼭 필요한 사업이나,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는 공모방식으로 사업대상을 선정한다. 장성군에서 사업계획서를 충실히 작성해 제출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청백한옥 운영자 홍정명씨는 “홍길동 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한 도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읊소했다.

이에 주순선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테마파크가 지난 2004년 지정돼 상당히 노후됐으나, 작년 기준 12만 명이 방문하는 등 장성의 대표적인 관광지다”며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 공모 선정을 통해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테마파크의 경우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현해 활성화할지가 중요한 만큼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된다면 더 많은 규모의 예산도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 시민체감형 제품실증 기업 13곳 선정

도서관·공원 등 장소 맞춤형 제품 개발·고도화 반영 등 기대

광주시가 ‘시민체감형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 13개사를 최근 선정, 10월부터 실증에 필요한 장소를 맞춤형 지원한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혁신기술을 보유하고도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 창업기업들에게 도서관·박물관·미술관·공원 등 연령별·계층별로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장소를 실증 장소로 제공한다.

기업들은 이를 통해 고객의 불만족, 요청사항 등의 다양한 수요를 제품 실증단계부터 데이터를 축적, 제품개발이나 고도화에 반영해 제품 출시 이후 영업 이익 증대를 도모한다. 이번에 선정된 창업기업들은 과제별 최대 1억원의 실증비용을 지원받으며, 실증 완료 최종 평가 후 광주 시장 명의의 실증확인서를 발급받게 된다.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은 지난해 36개사를 지원해 매출액 85억원 달성, 신규고용 56명, 국내외 판로확보 등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노병하기자

광주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오늘 출범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참여 노동계·경영계·학계 등 구성

광주지역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가 16일 출범한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7월1일 제정·시행된 ‘광주시노동기본조례’에 따라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출범한다.

위원회는 한국노총·민주노총 대표 등 노동계 4명과 광주상공회의소·광주경영

자총협회·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 대표 등 경영계 3명, 호남대학교·화순전남대학교병원 대표 등 학계 2명, 안평환 광주시의원, 광주교통공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시 노동일자리정책관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16일부터 2026년 10월15일까지 2년 간이다.

위원회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주요 시책에 대해 심의·자문한다. 주로 노동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추진실적 평가, 노동자

의 권리보호·증진사업, 노동복지사업 추진, 노동정책 자문, 노동권익센터 운영, 노동협력관계 구축 등의 기능을 한다.

특히 위원회에는 양대 노총이 참여해 조직노동자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따른 미조직 및 취약 노동계층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게 돼 보다 실효성 있는 노동자 권리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창호 노동일자리정책관은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실감나게 담아내는 노동정책을 수립해 노동자 권익증진과 노동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기자

No.1 Premium Balance Golf Ball

단 하나의 진짜

Yes & true balanced

밸런스 라인

PERON 엑스페론